

與野, 8개 상임위서 ‘내란종식·한미관세협상’ 등 송곳 검증

국정감사 첫날

與,尹-국민의힘 협력 여부 감사
조희대, 국감장 증언 없이 퇴장
野, 김현지·민중기 등 출석 요구
대미투자 질의에 “베스트 장관 설득”
캄보디아 범죄 조치 처리 약속도

국회가 13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종식’을 기조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심판’을 기조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려는 여야의 정면대결이 펼쳐질 이달 말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협력 여부를 밝혀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

감장 증언대에 서느냐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

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증언으로 국감장에 남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느냐 여당의원의 질의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침묵을 지키며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안들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책과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복구 지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근로자 체포 구금 사건 ▲캄보디아 대학생 폭행 및 고문 사망 사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주요 현안을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연휴 동안 국감 불출석 논란으로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국

감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와 외통위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베스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스트 장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범죄 조직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한 끝에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해외 국민 안전에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조현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체류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

“K-컬처, 국격·국력 핵심 문화 종합대책 수립 필요”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화산업 진흥방안 주제로 집중 논의
콘텐츠 기반 확충 혁신에 속도내야
문화예술이 사회 안정망 강화 노력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업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문화산업 진흥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 산업 진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휴 기간 수렴한 민심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 등이 많이 앞서있어도 압도적이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

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문화라고 하면 음악, 예술,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체계”라며 “K-팝부터 시작해 K-드라마, K-무비(영화)를 넘어 이제는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에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에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서둘러야 하겠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